

# “호남고속철 2014년 개통 차질 우려”

### 차량도입 지연 탓... “기존 노선 활용은 호남 푸대접”

#### 유선호 의원 지적

철도차량 도입 지연으로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7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에 도입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할 고속차량 도입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통상적인 차량제작기간이 3~4년임을 감안할 때 호남고속철도의 2014년 개통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차량도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에 도입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모조차 못하고 있다고 유 의원을 지적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2년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난 2009년 4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애초 2015년 개통예정이었던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1년만 앞당겨 2014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 ‘광주~목포’ 구간은 오는 2017년 개통할 예정이다. 공사비도 애초 10조 5417억원에서 11조 3382억으로 상당

조정했으며 이중 차량구입비는 7535억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의 2014년 개통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철도시설공단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호남고속철 제작사 선정 및 계약 등 2014년 개통시까지 차량도입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직접 대선공약까지 하고 지금까지 조기개통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왔는데 이제 와서 차량도입 문제로 인해 개통이 늦어진다면 이는 정부정책 실패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실재로도 귀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히 이날 국감에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 세부사업현황에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을 신설노선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노선을 고속화하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며 “고속철도 사업 중에서 ‘광주~목포’ 구간만 유일하게 기존노선을 활용, 저속분차로 만들겠다는 것은 호남선 복선화가 36년이나 걸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호남을 푸대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재무건전성 갈수록 악화”

### 조호권 시의원, 무분별 개발 사업 탓... 부채비율 72%

광주도시공사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과 중장기 대응전략 부족 등으로 인해 재무건전성과 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호권(민주·북구 5) 광주시의원은 27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도시공사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과 조건의 유연성 및 신속성 부족, 재무건전성 악화, 중장기 대응 전략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시 대행사업을 맡다 보니 경영 악화와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의 사업수익은 ▲2009년 1083억원 ▲2010년 848억원 ▲2011년 57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사업수익은 200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부채비율은 매년 상승하면서 외부차입금의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총 자산 8536억, 부채 6144억원)은 71.9%나 되고, 부채 중 각종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행한 공사채는 4240억원에 달하며 이중 754억원만 상환했다”며 “각종 부채에 따라 지급하는 금융비용만도 올해 248억원에 달한다”고 재무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도시공사의 총 비용대비 금융비용 비율은 평균 25.6%로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광주도시공사의 빚잔치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빛고을CC ▲어등산관 율해 사업수익은 200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138억원 매입) ▲빛고을고객센터 등의 사업이 경영 및 조직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우(민주·동구 1) 시의원도 이날 시정 질의에서 “도시공사의 5개 수익시설인 상무골프연습장과 영주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영주골프센터, 황금주자장 등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 시설도 노후화해 있다”라며 “민간위탁과 공격적인 마케팅, 시설개선 등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채수입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혁신도시와 진곡산단 개발사업 등 준공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분양 선수급 수입 1963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40%로 전국 개발공사 평균부채 비율 321%에 비해 높지 않다”며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여수산단 부하집중 분산 변전소 필요”

#### ■ 국감 현장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지난 9월 15일 발생한 정전사태 등 여수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정전예방과 보상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9·15 정전사태때 중소기업들이 집중피해를 입

었는데 당국이 현황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전에 대비한 산단내 전력시설물 설치 현황을 요구했지만 산단공이나 한전, 지경부 모두 자료를 내지 못하고 현황파악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지난 1월과 9·15 사태 등 최근 5년간 크고 작은 정전으로 많은 피해가 났는데 보상과 함께 부하집중 분산을 위한 변전소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석 산단공 이사장은 “(9·15 정전) 피해상황을 접수받은 상태이며, 지난 1월 발생한 정전은 기업의 구내 전기설비 고장 등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어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여수산단의 경우 내달 준공 목표로 4개 송전선로 추가설치 공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은 산단내 기

업들이 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산단 지정이 늘면서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진척이 안된 산단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산단지정 해제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분출하는 킬라우에아 화산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공개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모습. 지난 1983년부터 분출이 이어진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지난주부터 용암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약 2.3마일(약 3.7km) 길이의 용암대가 형성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촬영돼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공개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모습. 지난 1983년부터 분출이 이어진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지난주부터 용암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약 2.3마일(약 3.7km) 길이의 용암대가 형성됐다.

/\*연필뉴스

####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 광주시 최하위

#### 정현애 광주시의원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애(민주·비례) 광주시의원은 27일 시정 질의를 통해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총 253억6300만 원으로, 법정적립액 653억5900만 원의 3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서울 100%, 부산 102%는 물론 16개 시·도 평균 8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강원·전남·전북·제주 등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조차 100% 또는 이에 가깝게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했다”라며 “특히 광주시는 재난관리기금이 가장 적은데도 기금 50억원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용자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업성 없다’ 불구 국책사업 38% 강행

#### 김정 의원 국감자료

지난 10여년 동안 국책사업 10개 중 4개 가량이 ‘사업성 없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1999년 이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0을 밑돈 국책사업은 249건(124조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94건(51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지만, 그 미만이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3122억 규모의 울릉도 사동항 2단계 사업은 2009년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B/C가 0.15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소요비용이 4조원을 웃돌지만 2009년 조사에서 B/C가 0.210에 불과했다. 이들 두 사업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최종종합평가(AHP)에서도 각각 0.451, 0.450을 받아 기준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부 노무현 묘역 관리 방치”

#### 이낙연 의원 국감자료

보건복지부가 국가보존묘지 1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은 지난 2009년 8월에 지정된 국가보존묘지 1호로 ‘장사’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업무 소관을 다루고 있다”며 “그러던 중 작년 11월 60세의 남자가 오물을 투척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9년에 심사위원회를 1시간 동안 1차 개최한 후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에서 심사됐는데 당시 김낙성(행안부)차관은 ‘보존묘지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정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불비다’라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의원에 답변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백만 송이 장미,  
추억의 증기기관차와  
심청이가 함께하는  
孝의 대향연

제11회 곡성  
**심청 효문화**  
대향연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2011. 9. 30(금) ~ 10. 3(월) 4일간

주최 곡성군 | 주관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